

〈충남연구원 조직분야 감사 결과〉

감사기간: 2019.11.25.~11.29.

전문감사관 강영주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 소장)

충남연구원에 대한 본 자체감사의 주요 쟁점은 ①센터와 연구원 부서 간 중복기능 검토, ②센터 구성원들의 계약직 직위 적정성 여부와 인력규모 적정성, ③센터 사무실 위치 적정성의 세 가지이나 이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되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안함

I. 센터와 연구원 부서 간 중복기능 검토

□ 현황

- 2019년 11월 현재 충남연구원 소속 센터는 10개이며 2007년부터 설립된 센터부터 가장 최근 2019년에 설립된 센터가 공존하고 있음
 -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(2015.3.27. 설립/ 내포별도청사 위치), 물환경연구센터(2007.2.9. 설립/ 내포별도청사 위치), 공공디자인센터(2009.2.23. 설립/ 연구원내 위치), 경제동향분석센터(2017.4.20. 설립/ 연구원내 위치) 경제교육센터(2009.8.25. 설립/ 연구원내 위치), 농업6차산업화센터(2011.6.1. 설립/ 내포사무실임차), 재난안전연구센터(2016.6.10. 설립/ 연구원내 위치), 마을만들기지원센터(2016.7.1. 설립/ 내포사무실임차), 어촌특화지원센터(2017.6.23. 설립/ 내포사무실 임차), 도시재생지원센터(2019.1.1. 설립/ 사무실 임차)가 여기에 해당함

□ 문제점

- 센터의 설립은 본청 부서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연구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
 - 사업집행적 성격을 가진 센터의 경우, 사업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나 소속된 인력은 연구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음
- 일부 센터의 경우 연구원의 기능과 중복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, 연구원과

센터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

- 일부 연구지원 성격의 센터의 경우, 외부의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연구원과의 기능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연구지원 성격이 강하더라도 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조사 과제 수행의 비중이 더 크므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판단됨

II. 센터 구성원들의 계약직 직위 적정성 여부와 인력규모 적정성

□ 현황

- 센터의 연구직 인력과 행정직 인력 모두 처음 임용될 때에는 계약직이었으나 현재는 연구직의 상당 비율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, 일부 행정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
- 센터 인력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하여 51명이며, 정규직은 정원 40명 중 현원은 33명, 계약직은 18명임
- 연구센터에 소속된 계약직 중에서 연구지원 성격의 센터에 소속된 계약직은 연구지원 업무를, 사업집행 성격의 센터에 소속된 계약직은 사업집행 지원 업무를 담당함
- 이들에 대한 채용은 연구원 본원에서 하고 있으나, 승진·징계 등 인사관리는 센터 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음
- 2018년까지 센터의 회계처리를 본원에서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정책사업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음

□ 문제점

- 센터의 인력 규모와 연구원 본원의 인력 규모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므로 대외적으로는 조직이 방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됨
- 예를 들어, 장애인 고용률(3.4%)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원 인력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명만 고용하면 되나, 센터 인력 규모까지 포함하게 되면 5명까지 고용의 의무가 발생함
- 사업의 일몰에 따라 센터가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 연구원의 인력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음
- 단기기간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사업의 일몰에 따라 인력 규모를 줄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정규직 인력의 경우에는 상

대적으로 어려움

Ⅲ. 센터 사무실 위치 적정성

□ 현황

- 충남연구원은 2008년 2월 이전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여 있었으나 이후 공주시의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음
 - 충남도청은 신청사를 건립하여 2013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음
- 충남연구원 사옥의 공간상의 협조 문제로 일부 센터의 경우 내포신도시와 공주시 타지역에 위치하여 있음
 -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, 물환경연구센터, 농업6차산업화센터 등 6개 센터가 연구원 외에 위치하고 있음

□ 문제점

- 10개 센터가 각기 흩어져 있어 행정관리상의 비용이 크며, 연구원과의 유기적 협조와 충남도청 본청과의 유기적 협조에 제약이 발생함
 - 행재정 지원팀이 각각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10개의 센터가 흩어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음

Ⅳ. 개선방안

□ 장기적 개선방안(문제발생 소지의 사전 방지)

- 향후 센터 설립시에는 조례상으로 일몰 시점과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 - 현재에도 조례상에 설치 연한과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효력에 관해 문제삼을 수 있음
 - 그러나 설치 단계에서 조례상으로 센터의 설치 연한과 이후 관리 방안까지 포함시키도록 한다면, 무분별한 센터 설치에 대한 부담(비용)을 지게 되므로 부서 차원에서는 사전제약이 될 수 있음
- 충남연구원과 센터 간의 공간적 거리와 또한 이들과 충남도청 간의 지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한 비용 발생의 문제는 향후 충남연구원과

센터들이 충남도청과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됨

- 현재 시점에서는 정례적 회의를 하거나 또는 화상회의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음

□ 중기적 개선방안(현재 문제점에 대한 본청 차원에서의 관리 방안)

- 현행 센터들의 문제점은 본청의 각 해당 부서, 연구원, 센터들 간 다양한 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
 - 센터 설립의 주체가 되는 충남도청의 해당부서는 사업 관리의 편의성에 의해 센터 설립을 선호하는 입장
 - 연구원은 센터 설립으로 인해 기능 보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관리비용 증가(본원 박사급 인력의 지원, 채용절차와 같은 행정 지원 등)와 방대한 조직 운영이라는 오해로 인해 센터 설립에 대한 부담 존재
 - 센터 입장에서는 연구원에 통합되거나 연구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음(모든 센터가 동일한 입장은 아님)
- 따라서, 향후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의 주체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, 특히 본청에서는 센터 설치와 관련된 각 부서들을 총괄하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와 협상의 최종 책임을 맡아야 할 것임
 - 충남도청의 각 부서들이 향후에 센터 설립 시,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센터 설치에 대한 일차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
 - 연구원 입장에서도 각각의 부서와 협의하는 부담을 줄여 향후 관리방안에 관한 협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

□ 단기적 개선방안(현재 문제점에 대한 연구원차원에서의 관리 방안)

- 센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향후 관리방안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현행 10개 센터는 연구중심 센터, 집행중심 센터, 중간지원기능 중심 센터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, 이들 각각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음
 - 연구중심 센터는 연구원 본원과 통합가능성 검토가 가능하며, 집행중심 또는 중간지원기능 중심 센터는 분리 및 타기구와의 통합을 검토할 수

있음

- 센터 소속 연구직 및 행정직 등의 인력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사전 계획 마련이 필요함
 - 센터 설립이 연구원 외부의 의사결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원 자체 관리 문제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, 센터 소속 인력의 규모 수준과 관리 방식에 관한 사전 내부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
 - 최소한의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으나 설치 연한이 제한적인 센터의 경우에는 관리의 유연성을 위해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음
 - 다만, 연구원의 위치상의 문제와 인근 지역에 국책 연구기관과의 경쟁 관계 등으로 인해 계약직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으므로 계약직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